지식공유 Brief

2026
VOL. 05

지식공유브리프 아카이브 바로가기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경제안보 시대의 차세대 반도체 국제협력: 스웨덴 사례와 한국의 실행과제

『2027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전망』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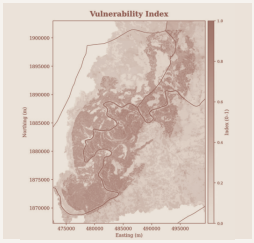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AI 전환의 시대, 서울이 걷는 길

KSP 포커스

[2025/26 라오스 II KSP]
라오스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홍수 및 가뭄 관리 기술 역량 강화





CID 연구포커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행사

「202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성료

2026 KDI-OECD 글로벌 포럼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

「KDI-OECD DEV 공동 세미나 – 기후변화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개최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경제안보 시대의 차세대 반도체 국제협력: 스웨덴 사례와 한국의 실행과제



구 상 모
광운대학교 교수
한국전기전자학회 회장

smkoo@kw.ac.kr

반도체 혁신과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은 기초과학이 산업과 사회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힘을 상징한다. 트랜지스터와 청색 발광다이오드가 노벨물리학상으로 조명되었듯, 반도체 혁신은 기초과학이 소자와 공정, 산업으로 연결될 때 완성된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급증과 전기차 확산, 전력망의 고효율화·직류화가 가속화되면서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 소자는 전력 손실을 줄이고 시스템을 소형화·경량화해 AI 인프라와 직류 전력망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이며, 전기차·드론·로봇·우주항공 기기의 성능을 좌우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가 국가 에너지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결정하는 이유이다.

미·중 기술경쟁과 공급망 분절 속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단순한 교역품을 넘어 경제안보의 전략자산이 되었다. 그렇다면 생산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작지만 강한' 스웨덴을 왜 주목해야 하며, 양국은 무엇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1. 작지만 강한 유럽의 특화 노드: 왜 스웨덴인가

첫째, 대학과 연구기관의 긴밀한 역할 분담이다. 린셰핑대학교는 와이드밴드갭(WBG) 반도체 소재와 결정성장을 연구하고,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KTH)는 소자·공정과 시스템 연구를 수행한다. KTH와 국영 연구기관 RISE가 공동 운영하는 엘렉트룸(Electrum) 연구소는 시제품 제작과 파일럿 생산을 지원한다. 특히 RISE는 1990년대 초부터 30년 이상 SiC 소자·공정 기술을 축적해 왔다.

둘째, 국가 개방형 미세·나노공정 인프라 Myfab이다. 엘렉트룸과 찰머스, 룬드대학교, 웁살라대학교 옹스트롬 연구소 등의 청정실을 산학연이 공동 활용하는 분산형 생태계를 구축했다. 룬드의 MAX IV와 건설 중인 유럽파쇄중성자원(ESS)은 첨단소재 분석 기반을 더한다.

셋째, 산업계와의 실증 연계이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노르셰핑 시설은 200mm SiC 기판 연구개발과 산업화 경험을 보유한다. 온세미, 에릭슨, ABB, 사브 등이 소재·소자·시스템 연구에 참여하며, 볼보와 스카니아의 전동화 산업은 실제 수요와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 출범한 스웨덴 반도체역량센터(SCCC)는 이러한 기존 역량을 EU의 설계 플랫폼과 파일럿 라인에 연결하는 지원창구이다. 결국 스웨덴의 원천기술·공정·실증 역량은 한국의 양산 엔지니어링 및 대규모 전방산업과 높은 상호보완성을 갖는다.

2. 한-스웨덴 반도체 협력의 기반: 신뢰와 상호보완성

한-스웨덴 협력의 저변에는 오랜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은 6·25전쟁 당시 적십자 야전병원단을 파견하고 정전협정 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했다. 전후 의료지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이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 협력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단기 지원이 제도와 역량의 공동구축으로 이어진 선례이다. 한국이 2025년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 당시 선언에 서명한 데 이어 스웨덴도 2026년 합류하면서, 양국은 AI·반도체·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경제안보 협력의 다자 기반도 공유하게 됐다.

기술·산업 측면에서도 양국의 강점은 상호보완적이다. 스웨덴에게 한국은 반도체 양산 엔지니어링과 자동차·전자·전력 수요산업을 함께 갖춘 유력한 아시아 파트너이다. 스웨덴의 원천기술과 파일럿 성과를 한국의 제조역량·수요기업과 연결하면 공동개발부터 산업실증·시장확산까지 이어 갈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게 스웨덴은 WBG 기술과 개방형 실증 인프라, 시스템 수요기업 및 EU 공동연구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유럽 특화 파트너이다.

이러한 신뢰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한-스웨덴 반도체 KSP는 개별 기술교류를 넘어 양국 생태계를 비교하고 공동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스웨덴은 한국을 유럽의 기술·실증·표준과 연결하고, 한국은 스웨덴에 연구성과의 제조·사업화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3. 한국 반도체 국제협력과 KSP에 주는 시사점: 한-스웨덴 협력의 실행과제

향후 KSP는 후속 정책연구를 진행해 공동 로드맵을 기술 분야별로 구체화하고, 공동연구·산업실증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식공유를 실행 가능한 협력과제로 고도화해야 한다. 정책·경험 공유를 넘어 양국이 기술·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지식 공동창출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공동 팹 신설보다 양국 기존 시설을 연결하는 분산형 랩투팹(Lab-to-Fab)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소자·공정 공동개발, 신뢰성 데이터 구축, 전기차·AI 데이터센터·직류 전력망 등 운용환경에서 시제품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유럽 공동연구와 국제표준으로 확장해야 한다.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제2축(Pillar II) 준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스웨덴 연구기관과 함께 EU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동연구 성과도 소자·공정 평가기준, 신뢰성 프로토콜과 인증 데이터 등 국제표준화 의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공동 R&D와 실증을 위한 중장기 의제와 재원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은 공동 공모, 인력교류,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공유원칙을 설계해야 한다. 대학·연구기관은 파일럿 시설을 상호 활용하고, 기업은 실제 운용환경에서 검증을 담당해야 한다.

한-스웨덴 협력은 규모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을 연결하는 일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KSP를 공동실증·EU 연계·국제표준화로 이어지는 실행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국제협력이 공급망 확보를 넘어 지식과 시장을 함께 창출하는 모델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성과가 축적되면 신흥국의 전력망 현대화와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삼각 지식협력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

사진1 2025/26년 스웨덴 KSP 착수보고회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2027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전망』 발간
기술이 질서가 된 시대, 한중 협력의 다음 단계



김 준 연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센터장

dr.catchup@gmail.com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와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공동기획한 『2027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전망』이 오는 12월 발간된다. 22명의 저자가 과기안보, 산업전략, AI와 융합, 뉴프론티어, 한중협력 2.0의 다섯 축을 집필했다.

과기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달라진 한중관계

한중 관계는 세계화 시대의 보완 구조에서 신뢰와 동맹이 기준이 되는 기술 안보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풀스택 전략과 제약 적응형 혁신, 보조금 기반 대량생산, 공급망 통제를 결합한 복합전략으로 한국 주력산업의 정면 경쟁자가 되었고, 차이나 쇼크 2.0과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한국의 산업·공급망 위험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여기에 미국·유럽의 중국 배제론과 미·중 빅딜론이 겹치면서 한국은 반사이익과 규제 노출, 기회 소멸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대미 기술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방적 편승을 넘어 독자 역량, 공급망 다변화, 일본·유럽과의 보완 협력을 결합한 복합 프레임으로 대응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중국의 총연구개발비는 2024년 구매력평가 기준 1조 달러를 넘어 미국을 처음 추월했고,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핵심기술 추적에서 중국은 74개 기술 가운데 69개에서 선도 위치를 차지했다. 20년 전 미국이 64개 중 60개를 이끌었던 것과 정확히 뒤바뀐 구도다. 지난해 이 책이 제시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라는 명제는 이제 전망이 아니라 전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질문도 달라졌다. 지난 책이 "중국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물었다면, 이번 책의 질문은 "달라진 중국과 우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다.

다섯 개의 축에 담긴 글

이 책의 과기안보 부문은 김상배 서울대 교수가 이끌었다. 김 교수가 과학기술 질서의 변화를 짚었고,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박사가 중국의 과학기술 외교를, 이종식 KAIST 교수가 한중 과기협력과 연구안보를, 김상규 경기연구원 박사가 지능형 첨단 국방기술을, 김훈 상하이 올브라이트 로펌 변호사가 중국의 데이터 패권과 법제를 분석했다. 협력의 성과가 아니라 협력 그 자체가 심사의 대상이 된 시대를 반영해, 올해 연구 안보가 독립 의제로 올라섰다.

산업전략 부문은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중국의 과기혁신과 산업정책이 맞물려 작동하는 방식을 총괄했고, 김용신 인하대 교수가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과정을,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과학기술의 산업적 응용을 정리했다. 중국의 산업정책은 국가가 수요를 만들고 실증이 정책으로 환류되는 순환으로 볼 때 그 원리가 드러난다.

AI와 융합 부문은 원유집 KAIST 교수의 책임 아래 가장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 원 교수가 AI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백은혜 칭화대 교수가AI 반도체와 피지컬AI를, 백서인 한양대ERICA 교수가 AI for Science를, 이승환 경기연구원 박사가 휴머노이드를, 박강민 국민대 교수가 중국형 AX를,

정광복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단장이 자율주행을 맡았다. 지난해 '디지털 제국'으로 묶였던 영역이 독립된 축이 된 것은 AI가 화면 속 모델에서 물리세계를 움직이는 기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프론티어 부문에서는 우주항공청 차장을 엮임했던 노경원 경상국립대 교수가 우주항공을, 권용구 인하대 교수가 고분자 신소재를, 황명중 듀크 쿤산대 교수가 양자컴퓨팅을, 김정식 베이징항공항천대 교수가 수소에너지를, 이현정 절강대 교수가 생물학과 의료공학의 접점을, 조은교 산업연구원 박사가 첨단 바이오를 다루었다. 현지 대학 재직 연구자가 다수 참여해 현장의 호흡을 담았다. 이 부문의 영역은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통제가 작동하기 어렵고, 그만큼 협력의 여지가 남은 지대다.

마지막 한중협력2.0 부문은 앞선 네 축을 수렴한다. 필자가 중국 과학기술 부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제시했고,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글로벌 과기통상 관점의 한중 협력 모델을 정리했다. '2.0'은 수사가 아니라, 시장기회를 전제로 설계되었던1.0의 협력 문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다층적 위상

분야별 원고를 종합하면 중국의 위치는 단일하지 않다. 연구개발 총투자와 제조 역량에서는 중국이 앞서지만, 기초연구의 축적과 자본 동원력, 첨단 제조장비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이 우위를 지킨다. 경쟁은 층위별로 갈라져 진행된다. 중국 내부의 조건도 간단하지 않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했고 부채와 인구 감소가 성장을 제약한다. 그러나 이를 쇠퇴로 읽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 거시지표가 둔화되는 동안에도 하이테크 제조업의 성장률은 전체 산업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이 경쟁하는 자리는 감속하는 부문이 아니라 바로 그 가속하는 부문이다.

한국의 다섯 가지 전략 대응

중국은 풀스택 전략과 제약 적응형 혁신, 보조금 기반 대량생산, 공급망 통제를 결합한 복합전략으로 한국 주력산업과 정면으로 겹치는 자리에 섰다. 대응도 일방적 편승이 아니라, 미국과의 기술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독자 기술역량과 공급망 다변화, 일본·유럽과의 보완 협력을 함께 가동하는 복합 프레임이어야 한다.

먼저 경쟁에서는 고신뢰·고안전·고부가가치로 차별화한다. 중국의 자립형 혁신은 범용 중간재 시장을 줄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정밀성에 대한 프리미엄 수요를 키운다. 둘째, 공급망에서는 대체지를 확보한다. 탈중국이 아니라 높은 의존도에 대한 전략적 관리이며, 전략 품목을 재분류하고 국내 최소 생산기반과 동맹국 대체 경로를 갖추는 일이다. 셋째, 산업 협력에서는 선택적으로 연결한다. 자율주행과 ESS처럼 한국이 제도적 제약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환경은 활용 대상이되, 협력은 알고리즘과 핵심 데이터의 이전이 아니라 실증과 검증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실증은 열되 설계는 닫는 것, 이것이 관리형 협력의 실천적 의미다. 넷째, 미래 기술에서는 위험을 공유한다. 시장이 형성되기 전인 영역은 제도 장벽이 작동하기 어렵고 실패 위험이 커서 역량이 비슷한 국가 간 분담 유인이 크다.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보건 같은 저위험 영역에서 중국은 가격경쟁력과 시공 능력에서 강점이 있고, 한국은 기술 신뢰성과 국제규범 대응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제3국의 문제를 함께 푸는 방식으로 다자시장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 다만 중국 배제가 열어준 기회는 영구적이지 않다. 반사이익에 기대는 전략은 그 구조가 바뀌는 순간 무너진다. 기회가 열려 있는 동안 독자 기술력과 공급망 신뢰성을 제도화해 조건부 기회를 구조적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이 책은 위중유기(危中有機)를 이야기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떤 원칙 위에서 다룰 것인가다. 중국과 협력하되 흡수되지 않고, 동맹과 연결하되 종속되지 않는 것. 다름을 전제한 위에서만 지속 가능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가 이 책의 결론이다. ■

AI 전환의 시대, 서울이 걷는 길



김 만 기
서울AI재단
이사장

mgkim@saif.or.kr

사람 중심의 혁신을 향하여

인공지능(AI)은 이제 하나의 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의 운영 방식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켰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은 도시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로 활용하느냐입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높은 시민 역량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만으로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AI가 시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AI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AI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AI를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특정 기업이나 전문가만의 기술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활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혁신, AI 인재 양성, 기업 성장 지원, 시민 AI 교육을 함께 추진하며 사람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I 기반 행정 혁신과 지능형 도시 서울

무엇보다 AI 전환은 행정 혁신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는 AI가 지원하고, 공무원은 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정책 설계와 시민 소통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의 속도와 정확성은 높아지고, 시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AI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새로운 행정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분석해 혼잡을 줄이고, 도시 안전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전반을 하나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AI 도시 서울'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신뢰와 포용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AI

그러나 AI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AI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윤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알고리즘 편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책임 있는 AI를 구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AI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혁신과 함께 윤리를 실천하는 글로벌 AI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AI 격차를 줄이는 일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새로운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청년과 중장년, 어르신, 소상공인, 장애인 등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기술의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때 AI는 진정한 혁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 가는 글로벌 AI 도시

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 역시 AI 전환의 핵심 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실험되고 성장하도록 데이터와 기술, 투자와 인재가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이 실증의 장을 제공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협력 모델은 서울이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서울AI재단은 이러한 연결 플랫폼으로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 역시 얼마나 많은 AI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고 도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경쟁을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준비하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서울은 혁신과 포용, 기술과 신뢰, 성장과 공공성을 함께 실현하는 AI 전환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AI재단은 시민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AI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며, 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 되도록 사람 중심 AI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AI 전환의 시대, 서울이 걷는 길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앞세우는 길입니다. 그 길이 서울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높이며, 세계 도시가 주목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2025/26 라오스 II KSP]
라오스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홍수 및 가뭄 관리 기술 역량 강화



김 서 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shkim26@kdi.re.kr

홍수와 가뭄, 두 얼굴의 재난

중국 티베트고원에서 발원해 미얀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메콩강은 총길이 4,350km, 유역 인구만 7,000만 명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이다. 그 유역 한가운데 자리한 내륙국 라오스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집중호우로 마을이 물에 잠기고,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물이 부족해 농업과 생활용수를 위협한다. 한 해 안에 홍수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재난을 모두 겪는 셈이다. 강이 가까이 흐른다고 해서 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기에는 넘치는 물을 두려워하고, 건기에는 부족한 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

라오스 정부는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가전략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통합수자원관리(IWRM)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재난위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부처 간 데이터 연계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경보가 마을 단위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도 남아 있었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국가메콩위원회 사무국(LNMCS)을 협력창구로 하여 '라오스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홍수 및 가뭄 관리 기술 역량 강화'를 주제로 2025/26년 KSP를 신청했다.

지도 한 장에 담은 위험의 이유

이번 KSP의 핵심 산출물은 세방파이(Xebangfai) 유역의 홍수·가뭄 취약성 지도이다. 단순히 '어디가 위험한지'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위험한지'까지 보여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홍수 분석에는 강우 자료를 바탕으로 하천 유출량을 산정하는 수문모형(HEC-HMS)과 침수 범위를 계산하는 수리모형(HEC-RAS)을 결합했다. 여기에 인구·농경지·기반시설의 노출 정도와 대피시설 접근성을 함께 분석한 결과, 세방파이 하류의 농복·사이불리 지역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가능성이 큰 지역뿐 아니라, 침수 시 대피 여건까지 열악한 지역을 우선 정책대상으로 식별한 것이다.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재난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수량 부족뿐 아니라 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까지 분석했다. 가뭄위험도·민감도·용수공급능력·대체수자원 등의 지표를 유역 내 35개 소유역에 적용한 결과, 유역 동서부 외곽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튼2(Nam Theun 2) 수력발전소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발전소 운영 변화에 따른 의존 위험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 지도를 재난 발생을 예측하는 예보 시스템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도구로 규정하고 단계별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노후 배수시설과 수문을 정비하고 조기경보 장비를 설치하며, 중기적으로는 저비용 IoT 센서망을 확충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관측·예측·경보가 연계된 통합 물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취약성 지도가 관계부처의 연간 사업계획과 재난위험경감계획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진1 세방파이 유역 홍수 취약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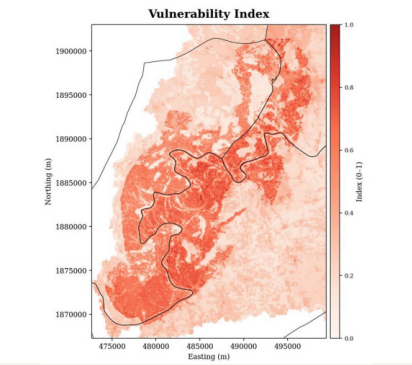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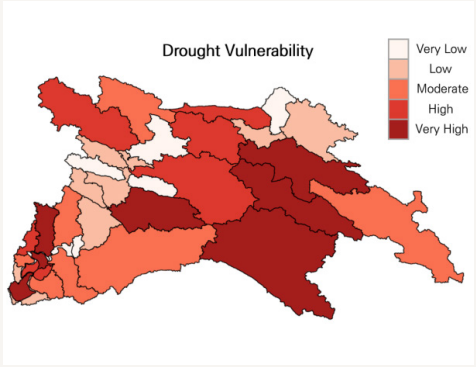


사진2 세방파이 유역 가뭄 취약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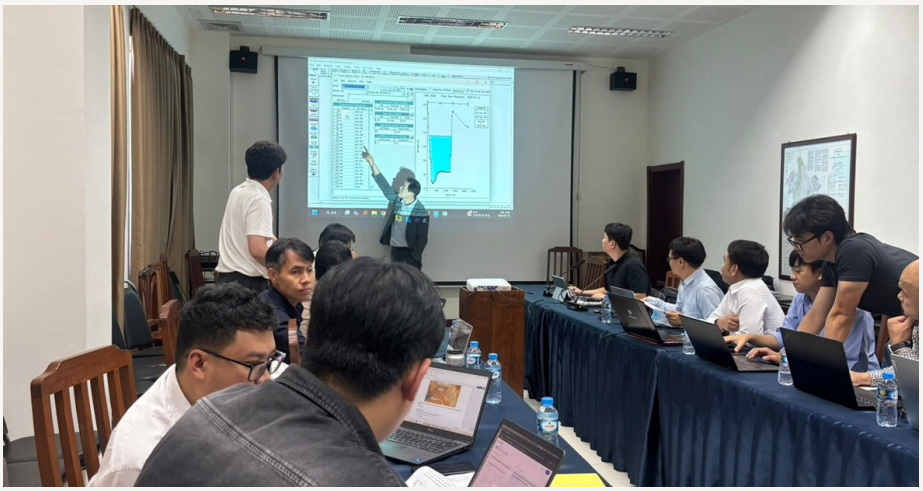


두 차례 역량강화 실습교육

정교한 지도도 현지에서 활용하고 갱신할 역량이 없다면 사업 종료 후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KSP 팀은 한국 초청연수뿐 아니라 라오스 현지 관계부처 공무원까지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확대했다.

첫 번째 실습교육은 정책실무자연수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 LNMCS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HEC-RAS를 활용한 홍수 분석과 가뭄 취약성 지도 작성 방법을 실습했다. 이후 더 심화된 반복 실습이 필요하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회 출장 기간에 두 번째 교육을 마련했다. 비엔티안에서 열린 현지 교육에는 초청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기상수문국(DMH)·관개국(DOE)·수자원국(DWR) 공무원까지 참석해 세방파이 유역 자료를 토대로 직접 모형을 구동했다. 두 차례 교육에서 현지 실무자들은 취약성 지도 작성 과정을 실습하고, 신규 관측 자료를 반영해 지도를 갱신하는 방법을 익혔다. KSP 종료 이후에도 라오스가 자체적으로 지도를 보완·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3 홍수·가뭄 취약성 지도 작성 실습교육



정책의 언어로 옮긴 연구 결과

2026년 7월 14일 비엔티안에서 2025/26년 라오스 II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가 열렸다. LNMCS 폰파세우트 푸리판(Phonepaseuth Phouliphanh) 사무총장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이번 취약성 지도와 대응 로드맵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김윤경 수석고문도 "연구 성과 도출에 그치지 않고, 라오스 정부가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LNMCS는 이번 정책제언을 국가 물관리 정책과 연계해 통합유역관리(IRBM)를 강화하고, 국내 예산과 국제재원을 활용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라오스 측의 구체적인 활용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4 2025/26년 라오스 II KSP 최종보고회



세방파이를 넘어

세방파이는 라오스의 14개 주요 강 유역 가운데 한 곳이다. 이번 KSP는 하나의 유역을 대상으로 취약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라오스가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활용할 역량을 함께 강화한 시범사업이었다. 따라서 이번 경험을 다른 유역으로 확산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라오스 측은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KOICA·EDCF 등 다른 ODA 사업과 연계한 후속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이번 취약성 지도가 라오스 정부의 예산 배분과 재난 대응계획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메콩강을 공유하는 인접 국가들과 협력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연구진 | 방호경, 김은경, 박미서



송 지 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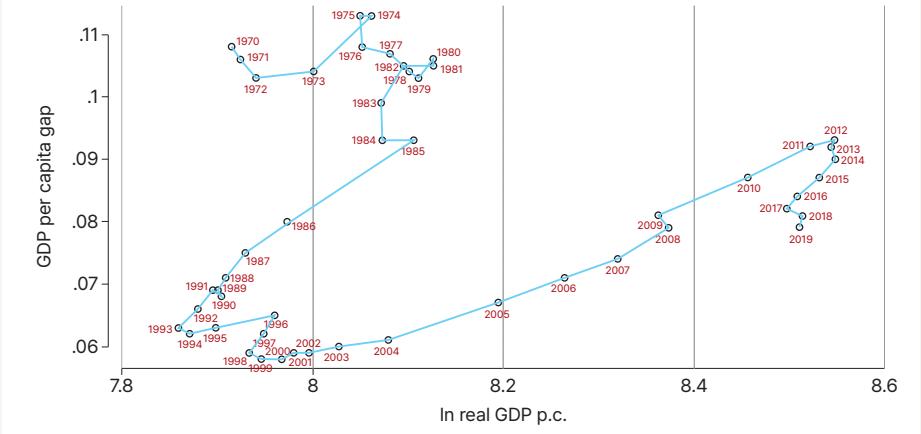
jesong@kdi.re.kr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는 인구 13억 명, 경제 규모 약 3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경제 통합체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로 평가받고 있다. 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의 「어젠다 2063」 플래그십 프로젝트(flagship project)의 핵심 요소로 2012년 AU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었으며, 54개국이 협정에 서명하고 2025년 2월 기준 48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다. AfCFTA의 상품 자유화는 전체 품목의 9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역내 생산 여부를 입증하는 원산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행정 부담은 역내 기업의 AfCFTA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AfCFTA의 이행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아프리카 역내 중소기업의 AfCFTA 활용율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 무역구조와 AfCFTA의 필요성

아프리카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1998~2023년 아프리카의 대외무역은 연평균 7% 증가했으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2000년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수출 확대에 기여했으나, 2011년 이후 원자재 가격 조정으로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자원의존형 국가는 원자재 가격 변화에 경제성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 결과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에서 2011년 이후 미국 대비 1인당 GDP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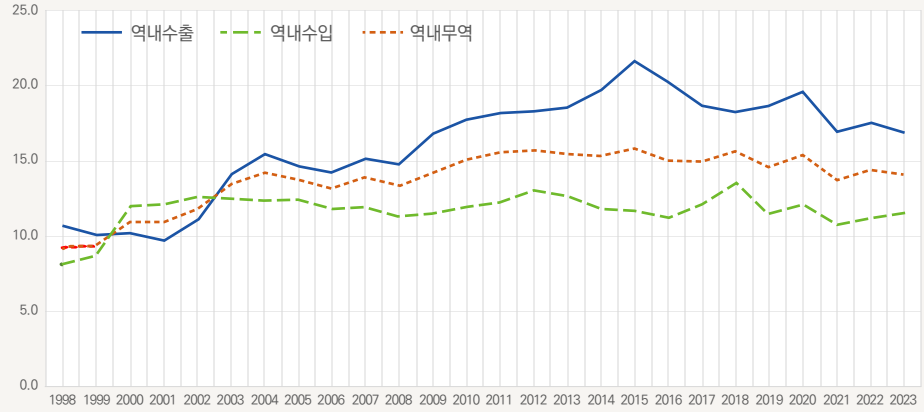
그림1 아프리카 1인당 GDP 및 미국과의 소득격차 추이, 1970~2019년



자료: Penn World Table 10.01을 이용하여 계산

반면 아프리카 역내 교역은 대세계 교역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역내무역 비율이 1998년 9.2%에서 2023년 14.1%로 확대되었다.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나, AfCFTA는 역내무역과 FDI를 확대하고 수출구조의 다변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기업들이 AfCFTA의 특혜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2 AfCFTA 회원국의 역내무역 비율 추이(1998~2023년) (단위: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를 이용하여 계산.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AfCFTA의 제도적 과제

아프리카 역내 기존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인 COMESA, EAC, ECOWAS, SADC 등을 비교한 결과, 통합 수준과 제도적 진전 부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관세 유예, 예외품목,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행정절차 등으로 특혜관세 활용이 제약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AfCFTA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제도와 절차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의 복잡성과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1> AfCFTA 및 RECs의 원산지증명 행정절차 비교

절차	AfCFTA	COMESA	EAC	ECOWAS	SADC
증명 방식	AE 가능, e-CoO 일부 도입	간소화된 CoO 시행, e-CoO 시범 운영 중	AE 가능, 간소화된 CoO 시행, 자가 인증 및 e-CoO 도입 준비 중	AE 가능, e-CoO 시범 운영 중	e-CoO 시범 운영 중
기관 지정 및 감독	국가별 지정기관과 AfCFTA 사무국의 연계 필요	회원국마다 발급기관 상이, 발급기관 시행 매뉴얼에 고시	지정기관 또는 관세청 주도, 검증 권한 있음	확인 기관 지정이 명확하지 않음, 비표준적 운영	국가별 지정기관 존재
사후 검증 절차	제도화되어 있음(무작위 조사 포함)	표준 절차 있음, 다만 실행 불균형	검증 방식과 절차 세분화	사후 검증 기능 미흡	통일된 검증 방식 존재, 통보 의무 있음
수출자 문서 보관 의무	최소 3년 보관, 통일 기준 제시	5년 보관 권고	5년 이상 보관 규정 있음	5년 보관 권고	5년 보관, 형식 표준화

자료: Banga et al., 2021; Byiers et al., 2023; COMESA Secretariat, 20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fCFTA와 주요 RECs는 전자 원산지증명(e-CoO)을 도입하거나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기 절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증기관 지정과 사후검증 방식도 상이하다. 따라서 AfC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RECs 간 관세·원산지 운영체계를 조화시키고 디지털 기반의 인증·검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수출기업의 비중이 높은 아프리카 역내무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복잡한 원산지 인증절차와 전문인력 부족은 중소기업의 AfCFTA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특혜관세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AfCFTA 사무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fCFTA 활용 제고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경험

AfC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과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수의 FTA를 체결한 이후 정책의 초점을 협정 확대에서 활용 촉진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교육 및 원산지 관리 전산시스템을 지원해 왔다. 대표적으로 FTA-Korea와 FTA-PASS를 개발·보급하였으며, FTA-PASS는 원산지 판정과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에서도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아프리카에 적용할 때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중소기업의 전산시스템 직접 활용이 제한적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관세당국의 원산지 판정 역량도 충분치 않다. 또한 원산지 기준 충족과 서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관세철폐의 편익보다 클 경우 기업이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시스템 도입보다는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행정역량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I 기반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터(Origin Determination Simulator)를 활용하여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산지 판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 간 소득·기술 격차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AfCFTA 사무국에 중앙집중형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별 시스템으로 확대하여 AfCFTA뿐 아니라 각국이 체결한 다양한 지역무역협정(RTA)의 상품양허와 원산지규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역량강화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플랫폼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활용할 수 있다.

호혜적 국제개발협력의 기대효과

이러한 협력은 아프리카와 한국 모두에 호혜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AfCFTA 활용률을 제고해 역내무역 확대, FDI 유치, 산업 다변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FTA 활용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과 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원산지 관리 분야의 국제적 논의와 표준 형성에 참여할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원산지 관리 및 통관과 관련된 거래비용 절감과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AfC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특혜관세율 활용뿐만 아니라 역내상품 이동을 뒷받침하는 물류 인프라 개선과 비관세장벽 완화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

「202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성료





2026년 9월 7일, 재정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주관한 「202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컨퍼런스」가 서울 그랜드 워커힐 비스타홀에서 개최되었다.

'KSP: 지식공유를 통한 AI·디지털 전환과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협력국 고위인사와 정부부처,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 약 350명이 참석해 AI·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에서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의 AI 활용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특화 인재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실현을 위한 KSP의 4대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케빈 치카 우라마(Kevin Chika Uram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는 국제협력이 일방적인 지식공유를 넘어 협력국과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공동창출(Knowledge Co-creation)'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세직 KDI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AI 시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창출하는 '창조적 인적자본'이 중요하다며, KSP 역시 공동창출(Co-creation), 실행(Implementation), 포용(Inclusion)을 중심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션 1에서는 <KSP 성과 스토리: 지식에서 실행으로>를 주제로 김회정 전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좌장을 맡아 케냐와 우즈베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KSP 정책자문이 제도 개선과 후속사업으로 이어진 성과를 공유하였다.

앤서니 키겐 상(Anthony Kigen Sang)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청 본부장과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 과정에서 KSP 정책자문이 EIPP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EDCF 금융지원 등 후속사업으로 연계된 과정을 소개하며 협력국의 주인의식과 명확한 사업 파이프라인,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노곰호자 우스모노프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국장과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는 KSP Plus를 활용한 핀테크 규제샌드박스의 법·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과 시범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 지원과 기관 간 조정, 데이터 거버넌스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세션 2에서는 <KSP 최신 사례: 성과의 지속가능한 후속협력>을 주제로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화국, 태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후속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솔로몬 지 만 라이베리아 재무개발계획부 기술담당관은 조세행정 디지털화를 위해 분절된 행정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적 ICT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파우 푸치 가바로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전문관은 도미니카공화국의 디지털 거버넌스와 공공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소개하며 정책제언을 재원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완나라트 찬누쿨 태국 나콘랏차시마시 시장은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해 기술 도입뿐 아니라 조직, 데이터, 통합 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제도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법·제도, 조직, 기관 간 협업과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2026 KSP 성과공유컨퍼런스」는 AI·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넘어 제도혁신과 인적 역량 강화, 후속 재원 및 사업 연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지식공유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폐회사에서 KSP 중기운용계획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공급망, 그린, 문화 등 4대 중점 분야의 전략기획형 사업을 확대하고, KSP 정책자문이 EDCF와 다자개발은행(MDB) 사업, 민간투자 등 실질적인 후속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이번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식공유의 역할과 KSP가 나아갈 방향을 재조정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의 대응 역량에 따라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지식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공유된 다양한 사례는 동일한 정책이나 기술을 적용하기보다 협력국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KSP 역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협력국이 당면한 문제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장기적인 정책협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026 KDI-OECD 글로벌 포럼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



2026년 9월 17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협력국(DCD)과 공동으로 2026 KDI-OECD 글로벌 포럼을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Whole-of-Government Co-ordin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Institutional Design to Effective Policy Practice)"를 주제로, KDI와 OECD 개발협력국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전(全) 정부적 조정 연구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DAC 회원국 간 정책 대화와 동료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오늘날 개발협력이 직면한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려면 공동의 목표와 전략에 기반한 전 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로빈 오길비(Robin Ogilvy) OECD 개발협력국 개발 개혁·파트너십 부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 정부적 조정이 ODA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기술 등 더 넓은 범위의 정책 수단을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식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국장은 축사에서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비전으로 설정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가쓰모 마쓰모토(Katsuo Matsumoto)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부이사장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개발협력이 지식 공동창출(Knowledge Co-creation)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발협력 조정 거버넌스 - DAC 회원국의 전 정부적 제도 구조와 조정 메커니즘>을 주제로 발표 두 편이 진행되었다. 윤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은 주요 공여국의 전 정부적 조정 체계를 비교·분석하며 제도적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안예자 룰라(Anjeza Llulla) OECD 개발협력국 주니어 정책 분석가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전 정부적 접근 현황과 운영 경험에서 도출한 주요 교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지선 국립외교원 부교수, 게이지 가타이(Keiji Katai) JICA 오가타 사다코 평화개발연구소 차장, 슈테판 클링게비엘(Stephan Klingebiel) 독일 지속가능개발연구원(IDOS) 국제·초국가협력 부서장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전 정부적 조정의 효과성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 정부적 조정의 실행 - 국가 사례 연구의 시사점>을 주제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한국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페데리코 비디치(Federico Vidic) 이탈리아 외교부 참사관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이탈리아의 위임 이행 모델을 소개하였으며, 니나 레나르디치 푸르카르트(Nina Lenardič Purkart) 슬로베니아 외교유럽부 공사참사관은 외교유럽부가 국가조정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상설 조정그룹과 전문가 자문기구를 통해 계획·이행·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슬로베니아의 조정체계를 소개하였다. 이어 한국 사례로는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CIDC)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국의 전 정부적 조정 체계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 정부적 조정과 주요 개발의제 - 기후변화와 민간 부문 참여>를 주제로 발표 두 편이 진행되었다. 우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평가팀장은 한국의 기후 ODA 거버넌스와 성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ODA 분야의 전 정부적 조정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라셸 스베로케슬러(Rachel Sberro-Kessler) OECD 개발협력국 정책분석가는 민간 부문 참여에 관여하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 간 효과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주요 DAC 회원국들의 민간 부문 개발의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어 로빈 오길비 부서장은 종합 논의를 통해 목표·책임·재원의 명확한 연계가 필수임을 강조하며, 개발협력 분야의 전 정부적 접근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이라는 점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개발협력을 둘러싼 과제가 기후변화, 안보, 이민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의 여건에 맞되 전략-예산-이행-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 정부적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KDI-OECD DEV 공동 세미나
기후변화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개최



2026년 9월 16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DEV)와 공동으로 KDI에서 「기후전환, 회복력 및 개발협력」을 주제로 KDI-OECD DEV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험이 심화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과제를 살펴보고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구자원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이번 세미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 간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데리코 보나글리아 OECD 개발센터 부소장은 녹색전환 과정에서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접근을 적용하기보다 각국의 발전 단계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정책 논의가 근거에 기반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부 기후변화와 녹색전환: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가 물가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의 물가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효과가 국가의 기후 대응 준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 국제개발협력이 사후 복구에 집중하기보다 사전적 적응과 회복력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임지연 OECD 개발센터 기후·개발팀 선임정책분석관은 「동남아시아 녹색전환의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동남아시아의 환경 연계 일자리와 농업·식품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저학력 노동자, 비공식 노동자와 농가의 높은 취약성을 지적하며 농업·식품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녹색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장은 두 발표에서 다룬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에 더해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산업 간 이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 전환위험에도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 개발협력이 기후충격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사전적 적응, 회복력 강화 및 녹색 구조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부 탄소배출 가격제와 에너지 보조금 개혁: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사점

후안 라몬 데 라이글레시아 OECD 개발센터 국가진단·전략팀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보조금과 가격: 개혁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석연료 보조금이 에너지가격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키우며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보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점진적인 가격개혁, 취약계층 보상, 이해관계자 협의 및 정부 부처 간 통합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이 EU 시장에 대한 의존도와 생산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국가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 탄소가격제와 저탄소 기술지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술 확산, 금융 및 국제협력, 측정·보고·검증(MRV)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과 한계감축비용을 기후위험과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동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설계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류하늬 에코브레인 이사는 전력 부문의 지원정책을 연료 조달, 발전, 송·배전, 소매 등 가치사슬 각 단계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탄소규제가 정교화될수록 시간대, 지역 및 공급망의 특성을 반영한 배출량 산정과 MRV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KDI-OECD DEV 공동 세미나를 계기로 양 기관은 기후변화, 개발 및 지속가능성 분야의 공동연구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연구협력과 정책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2025년 국제개발협력연구

I. 개발협력 정책연구	**경제안보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식량·물·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식량·물·에너지 안보 관련 개념 및 국제 동향 분석 ■ 아시아 중점협력국의 식량안보 수준과 현안 분석 ■ 에너지안보 개념 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전략 분석 ■ 식량-물-에너지 넥서스 기반 안보 개념 확립 및 국제개발협력 가능성 협력방안 도출
	개발도상국 물가·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비선형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후변화와 생산성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제기구·지역별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동향 및 전략 분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adaptation)으로의 국제개발협력 시사점 도출
II. 지역·국가 심층연구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 지식공유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요인 및 효과 분석 ■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사례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경험 분석 ■ 한국과 베트남 경제구역 비교를 통한 한국기업 참여 전략 제시 ■ 관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 아프리카 역내무역 추이 및 경제통합 현황 분석 ■ AfCFTA 협정 주요 내용 및 의의 검토 ■ RTA 효과 분석을 통한 AfCFTA 이행 시사점 도출 ■ AfCFTA를 활용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모색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아태지역 무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 ■ 국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여 한국의 기후 ODA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특징 분석 ■ 디지털 무역 이론 및 ASEAN·인도-태평양 지역 정책·규제 동향 분석 ■ 디지털 전환과 무역 확대가 개도국 성장·무역·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도출 ■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III.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5: 사례와 평가** ■ 주요 협력국의 분야별 정책사례에 대한 개별적 연구·조사(Case Study) ■ 몽골/주택금융, 베트남/농촌개발, 코스타리카/탈탄소, 헝가리/교통 정책의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요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KSP, EIPP 정책자문사업에 시사점 도출

국제협력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25	■ 공적개발원조(ODA) 전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조정 거버넌스 공동연구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I)	2023	■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아시아개발은행 (ADB)	2021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 (APO)	2024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2023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2021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2020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4-25	■ 사법제도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강화에 관한 가이드
	2021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미주개발은행 (IDB)	2021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	2022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연구
	2018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 (UNDP)	2017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국제 행사

2025	**KDI-LPEM 공동 세미나** 1차 ■ 일시/장소: 2025년 8월 2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제: 불확실성 시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 방안 2차 ■ 일시/장소: 2025년 12월 11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제: 중소기업(MSME)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2025 KDI-World Bank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2025년 9월 25일 / 서울 ■ 주제: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
	영국 앨런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 인공지능 표준 및 규제 공동 세미나 ■ 일시/장소: 2025년 11월 18일 / 영국 런던 ■ 주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AI 표준화 및 규제 제도 방안
	ADBI: 정책라운드테이블 ■ 일시/장소: 2025년 12월 9일-10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제: 질적 성장을 위한 아시아 미래 번영 구축
2024	**세계은행: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 ■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 / 워싱턴D.C. ■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
	브루킹스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 ■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 / 워싱턴D.C. ■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
	ADBI: 2024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 동경 ■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
	헝가리 인공지능 정책 및 규제 제도 공동 세미나 ■ 일시/장소: 2024년 10월 3일 / 헝가리 부다페스트 ■ 주제: 인공지능 정책과 규제 제도 방안: 규제, 공공서비스, 혁신
2023	**브루킹스 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 ■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 / 워싱턴D.C. ■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
	ADB: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 인천 송도 ■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
	ADB: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I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 ■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 인천 송도 ■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
	세계은행 TDLC: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 동경 ■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
2022	**2022 KDI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 서울 ■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2020	**2020 KDI 글로벌 포럼** ■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 서울 ■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

2026년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2026년 4호 ▶	
이슈톡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의 중요성 | 김권일
동향 분석	Economic security beyond Europe's borders: How the EU is reshaping its international partnerships | Ivano di Carlo
KSP 포커스	세르비아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 정책 의지에서 실행 역량으로 | 유지민
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 나정현
2026년 3호 ▶	
이슈톡	Collabor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chievements and Future Prospects | Katsuo Matsumoto
동향 분석	글로벌 난민 위기 장기화와 인도적 지원의 한계: HDPN 접근법으로 난민 대응 패러다임 전환 | 한상아
KSP 포커스	한-영 6G 표준협력과 KSP의 새로운 역할 | 송지은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 | 박지은
2026년 2호 ▶	
이슈톡	코끼리 대해부 '개발협력에서 국익' | 개발연구실 독일 개발협력 개혁과 한국 지식협력에의 함의 | 우혜영, 백진영 AI 협력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무역 데이터로 본 협력의 출발점 | 방호경
동향 분석	우루과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로의 전환과 향후 협력과제 | 권유빈 LSE Data Science Institute Brief | Christopher Thomas
KSP 포커스	스타트업으로 여는 성장 전환: 우즈베키스탄과 KSP의 새로운 도전 | 윤근영
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물가·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 송지은
2026년 1호 ▶	
이슈톡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그 이후: 한국 개발협력의 나아갈 길 | 한승헌 Revitalising the narrativ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case of Germany | Niels Keijzer
동향 분석	인도네시아 플랫폼 경제 현황 | 이미연
KSP 포커스	[2024/25 인도네시아 KSP]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투자 촉진과 제도적 과제 | 김희라
CID 연구포커스	아태지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 및 대응 방안 | 윤지희

▶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지식공유
Brief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문의 김소희 연구원(044-550-4401, sohee.kim@kdi.re.kr)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발행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편집위원 **윤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편집간사 **김소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문의 044-550-4401,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